

해수면 상승이 해양경계와 섬에 미치는 법적 쟁점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from sea level rise which will have an effect on maritime delimitation and legal status of islands

김민수*

Kim Min Su

목 차

- I. 서론
- II. 해수면 상승과 해양경계 변화 가능성
- III. 해수면 상승이 섬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 IV. 해양경계 안정화를 위한 제언
- V. 결론

Abstract: From the legal viewpoint, sea-level rise is expected to have an effect on maritime delimitation and legal status of islands by moving the coastline landward and submerging small islands states. Also, it can lead to fundamental change of the current legal regime of ‘Law of the Sea’ in a way of struggling to secure its national ocean interest between coastal states and the other states. This outlook calls for legal solutions for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pare. This study targets show hints on the solutions from the viewpoint of ‘lex ferenda’ as well as ‘lex lata’.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s ‘permanent’ maritime delimitation will be more conducive to stable inter-state ocean relations than ‘ambulatory’ one. Based on the assumption, this study tries to make legal suggestions in three dimensions: state, regio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For state’s dimension, coastal states as well as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guan72@kmi.re.kr

small islands states can take preventive measures by constructing artificial islands or installations to prevent its base points and island itself. Also, masterly inactivity or historical waters doctrine can be a practical tool for the states, regardless of each disputable legality. For regional dimension, two or more states can conclude a maritime delimitation agreement stipulating a clause of ‘permanent’ maritime boundaries. For global dimension, so called ‘Agreement on Sea Level and Maritime Delimitation’ can be concluded to implement ‘Law of the Sea Convention’. On a more long term basis, states’s consistent practices as well as UNGA’s resolutions of trying to let maritime boundary permanent can be a clue of ‘opinio juris’ and finally create international customary law.

Key Word: sea-level rise, opinio juris, maritime delimitation agreement, Law of the Sea Conventio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I. 서 론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화두 하나는 단연 ‘기후변화(climate change)’이다. 기후변화로 야기된 자연현상이 정치·사회 영역을 포함해 우리 삶에 미칠 영향력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은 소도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면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¹⁾ 지구온난화 여부에 대해선 찬반의 목소리가 있지만²⁾, 미래의 해수면 상승은 정부 간 기후변화패널

1) Cleo Paskal은 2007년 논문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국가 간 갈등을 증가시키고, 특히 소도서 국가들의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Cleo Paskal, ‘How climate change is pushing the boundaries of security and foreign policy’, EEDP Chatham House, 2007.6.)

2) 북극의 해빙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12년 8월에 비해 2013년 8월의 북극 빙하가 오히려 60%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일보, ‘온난화라더니, 북극빙하 되레 60% 늘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9/09/20130909004839.html> 2013.9.9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을 중심으로 한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013년 9월 말 IPCC는 제5차 보고서를 통해 2100년이면 해수면이 최고 98cm까지 상승될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놓았다.³⁾ 이는 2007년에 최종 제출된 제4차 보고서의 최대 예상치인 59cm 보다 대폭 상향된 전망이다. 또 다른 연구진은 남극대륙에서 표면 해빙뿐만 아니라 물밑 얼음까지 하루 평균 6cm, 1년에 22미터씩 녹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⁴⁾ IPCC의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평균 63cm 상승할 경우 뉴욕·상하이 등 주요 연안도시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되고 우리나라도 부산 저지대 일부 등 연안도시들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지구 해수면이 1m 상승 시에는 투발루의 섬은 완전히 가라앉게 되고, 바누아투 섬의 75%, 마셜군도의 40%가 소실된다,⁵⁾ 이에 해양관할권 축소⁶⁾는 물론이고, 섬 자체가 사라지는 국가존립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법제도를 통한 규범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범 세대적이며 갈등 내재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피해는 주로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몫이지만,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은 현 세대의 몫이라는 점에서 ‘범 세대적’이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양경계가 변화할 경우 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갈등 내재적’이다. 이는 범 세대적인 의무를 규율하고, 갈등 또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사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준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사, 2013년 9월 10일 인터넷 검색

3) IPCC, 'Working Group I Contribution to the IPCC Fifth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Summary for Policymaker.', 2013.9.27, p.18.

4) MBC, '바닷속 얼음도 녹는다'. 남극 '물밑 해빙' 첫 확인, 2013.10.1자 방송(2013.10.1 인터넷 검색)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347407_5782.html.

5) Charles Di Leva, Sachiko Morita, 'Maritime Rights of Coastal States and Climate Change: Should States Adapt to Submerged Boundaries?', *Law&Development Working Paper No.5*, World Bank, 2007.8, p.18~19.

6) 태평양도서포럼을 구성하는 14개 태평양 소도서국가(피지, 크리바티, 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마셜군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의 총 EEZ 면적은 1,900만 km²에 달한다. (OPRF, 'Proposal for Rio+20, appendix I', For the Bet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slands and Their surrounding Ocean Areas, 2005.9, p.11.)

규범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이 야기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 현안을 정확히 짚어 내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경계 문제가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 간 이론적인 논쟁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규범화 작업은 아직 미진하다.⁷⁾ 그 이유는 아래의 두 가지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아직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이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해양경계의 변화가 해양경계 및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데는 아직 인식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규범이 현실에서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본다면, 해수면 상승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의 일이고, 이를 고려해 현 시점에서 규범화 작업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가져올 영향력에 주목하며, 국제법적으로 예상 가능한 쟁점들을 ‘현실에 있는 법(lex lata)’과 ‘앞으로 있어야 할 법(lex ferenda)’의 시각에서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현재의 국제법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고, 만약 법의 공백(legal gap)이 있다면 어떠한 규범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가져오게 될 여러 가지 국제법적 쟁점⁸⁾ 가운데 해양경계 및 섬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될 영향에 대해 국제해양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해

7)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기점 및 해양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Soons 교수와 Caron교수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해수면상승에 따른 해양경계 논쟁의 시발점인 기선의 문제에 대한 국제법협회(ILA)의 보고서가 2012년 8월에 제출되는 등 성과도 나오고 있으나,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8) 국내법적 논의는 미국 등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의 소실을 재산권 및 연안육역 토지 소유주의 권리 변화 등의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외이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Robert Meltz, 'Climate Change and Existing Law: A Survey of Legal Issues Past, Present and Future', 의회보고서(CRS), 2013.3.25 참조.

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경계 변화가능성을 둘러싼 이론 및 학자 간 논쟁들을 살펴보고, 해양경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국가, 지역 및 국제사회 측면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II. 해수면 상승과 해양경계 변화 가능성

1. 유엔해양법협약 상 기선제도

1) 협약 조문과 해석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해양경계와 관할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정해진다. 협약 상 기선제도는 크게 통상기선(normal baseline)과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으로 나뉜다.

(1) 통상기선

협약 제5조는 통상기선을 “연안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대축적지도에 표시된 해안선의 저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⁹⁾ 이에 대해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는 제5조가 ‘해안을 따른 저조선(실제 저조선)’과 ‘연안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해도에 표시된 저조선(해도 상 저조선)’ 등 두 가지로 해석되어왔다고 봤다.¹⁰⁾ 이는 저조선의 변화가 해도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실제 저조선과 해도 상 저조선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은 이후 논의할 학자 간 논쟁, 즉 해수면 상승이라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기선과 해양경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영구적으로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9) 협약규정은 ‘~the low-water line along the coast as marked on large-scale chart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coastal state’임

10) ILA, “Baselin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2012.8, p.8.

(2) 직선기선

통상기선이 연안의 자연적 형태(natural configuration)에 따라 형성되는 데 반해, 협약 제7조에 따르면 직선기선은 연안의 굴곡이 심하고 잘려 들어간 지역(deeply indented and cut into), 주변에 섬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a fringe of islands)의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안의 자연적 형태와 상대적으로 무관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안의 일반적 방향에 현저하게 벗어나서는 안 되며, 직선기선 내 해역은 육역과 충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¹¹⁾ 또한 판례는 직선기선이 기선을 결정하는 통상기선에 대해 예외적으로 엄격하게(restrictly)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²⁾

(3) 기타 규정

일반적으로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는 기선을 설정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수면위에 영구적으로 등대 또는 유사 시설물(installation)이 설치되는 경우와 국제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위한 기점이 될 수 있다.¹³⁾ 그리고 강이 바다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경우, 기선은 강둑의 저조선 상의 기점(points on the low-water line)을 연결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¹⁴⁾, 만의 경우 자연적 입구 양쪽의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않는 한 직선기선을 그을 수 있다.

11) 협약 제7조 3항 참조

12)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ICJ, 2001, para. 212.

13) 협약 제7조 4항. "The drawing of straight baselines shall not be drawn to and from low-tide elevations, unless lighthouse or similar installations which are permanently above sea level have been built on them or except in instances where the drawing of baselines to and from such elevations has received general international recognition.". 한편, 협약에 규정된 유사 시설물에는 어떠한 것이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항행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영구적이고(permanent), 실질적이며(substantial), 사실상의(actually)시설물이라는 견해가 있다.(U.S Commentary to the LOS Convention, 1994.9.23)

14) 협약 제9조 "If a river flows directly into the sea, the baseline shall be a straight line across the mouth of the river between points on the low-water line of its bank."

2) 판례의 입장

당사국간 해양경계를 확정하는데 가장 우선 고려되는 것은 어떠한 기점과 기선을 선택하느냐이다. 판례는 이러한 기점과 기선의 선택이 협약을 포함한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특히 직선기선은 통상기선의 예외로 인정되며, 협약이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 즉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주변 섬들이 많은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수면아래 잠긴 산호초,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영유권 분쟁 중인 섬¹⁵⁾ 등은 기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아주 작은 섬(very small islands)도 기점으로 인정한 사례¹⁶⁾가 있어 섬의 크기는 자체로 기점 인정을 위한 요인이라기보다 해안선과의 거리, 주민 거주 등 다른 요인과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2. 학자 간 논쟁: 해양경계 ‘불변(permanent)’ 對 ‘변화(ambulatory)’

육지의 경계는 육지 본토 위에 그어지는 것으로 한 번 그어지면 항구적인 성격을 가지나, 해양경계는 육지의 해안선과 기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기후변화, 특히 해수면 상승이라는 외부 환경 요인은 해양경계의 출발점인 해안선과 기점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경계의 특수성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경계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 학자 간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선 및 해양경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해수면 상승은 기점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해양경계도 변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촉발한 근본적 이유는 ‘바다의 현장’으로 여겨지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점의 변화가 기선 및 해양경계의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규정하

15) UN, *Handbook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2000, para. 159.

16)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econd Stage of the Proceedings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Eritrea and Yemen, 1999, para. 150.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경계의 변화는 연안국의 권리와 공해에서의 타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연안국과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려는 내륙국을 포함한 타국의 권리 간 충돌 및 이익의 대립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기선이 내륙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영해와 기존의 EEZ가 축소되는 경우 연안국의 권리가 줄어들게 되지만, 반대로 공해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져 통항 및 자원개발권 등에서 제3국 및 국제사회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¹⁷⁾

우선 해수면 상승에도 기선과 해양관할수역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국가 간 해양경계지도의 변화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2항과 제76조 9항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⁸⁾ 즉 협약 제7조 2항은 ‘삼각주(delta)’와 ‘불안정한 연안(unstable coast)’의 경우 저조선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직선기선은 연안국에 의해 변경되기 전까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륙붕의 경우 제76조 9항에 따라 유엔사무총장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영구적으로(permanently)’ 규정한 해도와 관련 정보를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선 쇠퇴가 대륙붕의 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선변화 등은 연안국 간 체결한 해양경계협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해양경계협정은 이미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가 간 합의를 이끌어낸 경우가 많아 기선변화에 따라 매번 해양경계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안의 물리적 위치의 변화와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해도 상 기선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 경우 해도가 공표된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없는 경우 사후 연안의 물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기선은 해도상의 기선으로 고정된 채 법적 효력을

17) Charles Di Leva, Sachiko Morita, op. cit., p.20~21

18) Jenny Grote Stoutenburg, ‘Implementing a New Regime of Stable Maritime Zones to Ensure the (Economic) Survival of Small Island States Threatened by Sea-Level Ris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26, 2011, p.274.

지속하게 된다.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명시적으로 실제 기선과 해도상의 기선이 불일치(discrepancy)하는 경우 해도상 기선에 따라 영해가 확정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explicitly) 언급하고 있다.¹⁹⁾ 이 경우 해도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는 한 연안 및 기선은 고정된(fixed)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반면 해수면 상승 시 기선과 해양경계가 변해야 한다는 입장은 ‘육지가 바다를 결정한다(land dominate the sea)’는 전통적인 명제²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협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기점과 기선에 근거해 해양경계가 그어져야 하며, 기점과 기선이 변화할 경우 당연히 해양경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대한 제네바협약 초안 작업 시 ILC 위원들은 ‘해안선의 변화(ambulatory coastline)’를 지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²¹⁾ 특히 해도 상 저조선이 실제 저조선의 변화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을 경우 해도에 나타난 정보가 실제 저조선과 차이가 있어 연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개발, 항행 및 어업 등의 다양한 해양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 국내법 판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 판례는 주-연방 간 해양경계는 유동적(ambulatory)이라고 보고 있다.²²⁾ 특히 ‘United States v. Alaska(1997)’에서는 “연안의 저조선의 변화는 해양경계를 확정하는 기선의 변화로 이어지고, 물에 잠긴 육역에 대한 권리는 기선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판시했다.²³⁾

19) *Ibid.*, p.164

20) 이 명제는 북해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Case(Germany vs Denmark, Netherlands), ICJ, 1969, para 96)에서부터 최근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2009, para 77)에 이르기까지 ICJ에 의해 천명되고 재확인되고 있다.

21) Charles Di Leva, Sachiko Morita, op. cit., p.18.

22) 관련판례로는 United States v. Louisiana, 394 U.S. 1969(Louisiana Boundary Case), United States v. Alaska, 521 U.S. 1997,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2007 등이 있음. *Ibid.*, p21~26.

23) “the shifts in a low-water line along the shore...could lead a shift in the baseline for measuring a maritime zone and that the state’s entitlement to submerged lands beneath the territorial sea would change accordingly as the baseline shifts.” United States v. Alaska, 521 U.S. 1997. *Ibid.*, p.22에서 재인용

■ 표-1. 학자 간 논쟁 비교 ■

	‘불변(permanent)’	‘변화(ambulatory)’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선 및 해양경계가 불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면 상승에 따라 기점이 변화할 경우 기점과 해양경계가 따라 변화함
제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9항, 제7조 2항의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으므로 협약에 따라 변화하는 기점에 근거해 해양경계가 정해져야 함 •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대한 제네바협약 초안 작업 시 ILC 위원들은 ‘ambulatory coastline’을 지지함 • 국제 판례를 통해 확인되는 ‘land dominate the sea’ 명제
국가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영국은 해도와 실제 연안 간 불일치(discrepancy)가 있는 경우 해도상의 기선에 따라 영해를 확장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대법원 판례는 주-연방 간 해양경계는 유동적(ambulatory)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는 ‘United States v. Alaska (1997)’임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안정성, 변화에 따른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CLOS 조항해석에 충실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 높임 • 실제저조선과 도면상 저조선의 차이 없음- 실제 도면을 토대로 한 연안보존 및 개발, 항행 및 어업 등 해양활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지가 바다를 결정한다(the land dominates the sea)’는 전통명제에 반함. • 제3국의 공해와 심해저에서의 권리 훼손 가능성 높음 • 해양 분쟁 대상 도서 소멸 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긍정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함 • UNCLOS 규정에 없음 • 실제저조선과 도면상 저조선의 차이-실제 도면을 토대로 한 연안보존 및 개발, 항행 및 어업 등 해양활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어려움²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안정성 훼손 가능(instability) • 비효율성(inefficiency): 저조선 변화에 따라 매번 이를 측정해서 지도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점 노출 • 기점 및 해안선 변화 방지를 위한 인공적 작업에 많은 비용 들어감

24) 2004년 12월 15일, 네덜란드 정부기관은 ‘Zeeland Bank’에서 타국의 어선을 네덜란드 어업수로지역에서의 불법어업을 이유로 체포했다. 법원은 2002년에 작성된 해도를 근거로 네덜란드 정부의 주장을 받아 들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2004년 12월 23일 새로운 해도가 작성되었는데, 이 해도에 따르면 해양경계 기점인 ‘간출지’가 사라지게 되어 네덜란드 어업수로지역에 변화가 생겼고, 이를 근거로 할 때 어업장소가 네덜란드 어업수역 밖이 된다. 이처럼 기점의 변화로 인한 해양관할수역의 변화를 해도에 반영할 경우 해양활동

3. 소결

기본적으로 해수면상승에 따른 기점 및 해양경계의 설정, 해안선과 기선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적 조치는 연안국에게 우선적인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경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해양경계획정은 항상 국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The delimitation of sea areas has always an international aspect)²⁵⁾이다. 이는 자국의 해양 경계 획정에서부터, 경계획정의 대항력과 효력에 이르기까지 국제법과 국제법 원칙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특히 마주보는 해역이 400해리가 안 되는 인접국과의 해양경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앞서 살펴본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실제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영향이 사례별(case-by-case)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국가 간 이해관계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²⁶⁾ 또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국제 판례의 사례가 없는 것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이라는 대외 환경변화는 현재 해양이라는 공간에서 국가가 누리고 있는 이익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넓어진 공해에서 제3국이 누리
는 항행 및 어업, 해양자원에 대한 이익이 커짐과 동시에 현재 소도서 국가를 포함한 연안국이 누리고 있는 해양관할수역에서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주체와 집행기관 모두 업무에 혼선을 지날 가능성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갈등 및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Clive Howard Schofield, 'The Trouble with Island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9.8, p.216-221.

25) 이 원칙은 어업사건(Fisheries Case, United Kingdom v. Norway, ICJ, 1951, p132)에서 흑해 해양경계 사건(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2009, para 137)에 이르기까지 ICJ의 주요 판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26) 예를 들어 연안국의 기선의 축소(receding baseline)나 기점의 소멸, 섬이 해수면상승을 통해 암석수준의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해양경계가 고정되어야만 해양관할 수역이 축소됨에 따라 예상되는 이익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EEZ나 대륙붕을 가지는 섬의 경우 영해를 포함한 총 해양관할수역은 43만 1,014㎢이며, EEZ나 대륙붕을 가지지 못하는 협약 제121조 3항의 암석(rocks)의 경우는 1,550 ㎢의 해양관할수역을 가지게 되어, 기점이 섬 또는 암석이냐의 구분에 따라 해양관할수역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Clive H. Schofield, 'Against a rising tide: ambulatory baseline and shifting maritime limits in the face of sea level ris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Islands and Oceans, 2009.1, p.75) 반면 연안국 이외의 내륙국가의 경우 기선의 후퇴로 연안국의 해양관할수역이 줄어들 경우, 넓어지는 공해로부터 얻는 이익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인접국가와의 해양경계협정이 필요한 대항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국가 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불안정한 해안선 및 기점의 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온다.

수 있다. 국가 간 이익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국가 간 이익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려가 법적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제4장에서 국가 간 이익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해양경계가 안정화되는 것이 변화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함을 살펴보고, 이를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해수면 상승이 기점으로서의 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하므로 이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III. 해수면 상승이 섬의 법적 지위²⁷⁾에 미치는 영향

1. 현황

섬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은 오랫동안 국제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섬을 기점으로 하는 해양경계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킬 전망이다.²⁸⁾ 하나는 해수면상승으로 인해 영해 기점 섬이 없어지는 경우와 섬이 암석이나 간조노출지로 변화하는 경우에 따른 국가 간 해양경계 변화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해빙으로 인해 새로운 섬이 등장하면서 국가 간 해양경계에 미치게 될 영향이다. 이렇게 해빙으로 인해 새롭게 발견되는 섬을 ‘온난화 섬’이라고 한다. 최근에 북극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빙하의 해빙과 이동으로 새로운 섬이 발견되거나 기존에 하나

27) 기점으로서의 섬은 해수면상승뿐만 아니라 화산폭발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에멘-에리트리아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중재재판소가 에멘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양국의 해양경계를 획정했던 ‘Jabal al-Tair’섬이 2007년 9월 30일 화산폭발로 인해 서쪽 지역이 소실되었다. Julia Lisztwan, ‘Stability of Maritime Boundary Agreements’,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7-1, 2012, p.154.

28) 한편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국가 간 분쟁대상 소규모 섬들을 가라앉게 함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 Wilson VornDick, ‘Thanks Climate Change: Sea-Level Rise Could end South China Sea Spat’, *the Diplomat*, 2012.11.08.

로 인식되었던 섬이 실제로는 수 개의 분리된 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²⁹⁾

한편 국가 간의 갈등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려되는 상황은 소도서 국가의 소멸이다. 이는 국가가 없어지는 문제이며, 국가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생존권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섬으로부터 대량 피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난민의 인정여부와 관련되어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해수면 상승이 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해양경계에 있어서의 섬의 지위

섬은 협약 제121조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인간의 정주(human habitation), 독자적 경제생활(economic life of their own)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섬은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 직선기선을 긋기 위한 영해 기점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섬이 해양경계 획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ICJ는 ‘형평한 결과(equitable result)’를 얻기 위해 ‘완전한 효과(full-effect)’, ‘부분적 효과(partial effect)’를 가지거나 해양경계 획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등으로 사례별로 다양하게 해석해 왔다.³⁰⁾ 예를 들어 에리트리아-예멘 중재사건의 경우 Dahlak섬은 일반적인 연안의 형태와 통합적인 부분(integral part)을 형성하므로 기점으로 삼았지만, Al-Tayr과 여러 개의 섬으로

29) 2007년 10월 미국인 탐험가 슈미트(Dennis Schmit)는 ‘떠돌이 개 웨스트(Stray Dog West)’로 명명된 섬을 발견했다. 이 섬은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의 이동으로 발견되었는데, 북극에서 700km, 그린란드로부터 4km 떨어져 있다. (김경신, “북극해에서 새롭게 발견된 섬,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 『독도·해양영토브리핑』, 제6호, 2008. 1. 7). 한편 과거 화산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섬의 생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1372년 아이슬랜드의 Kolbeinsey 섬의 생성(2020년 소멸 예상), 1919년 인도네시아 Banua Wuhu 섬의 생성(1935년 소멸), 1933년 호주 Falcon 섬의 생성 등이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해양경계협정 협상 중 화산활동으로 인해 ‘South Talpatti’섬이 새롭게 생겨났다. 이 섬은 벵갈만의 풍부한 석유개발권과 맞물려 양국간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다행히 그 후 이 섬은 사라졌다. 이상 Julia Lisztwan, op.cit., p.160~161참조.

30) UN, op.cit., p.33~35.

구성된 Al-Zubayr의 경우 예멘의 본토의 일부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³¹⁾ 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 사건에서는 섬의 크기에 상관없이 해양경계획정 기점을 삼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Qit'at Jaradah가 잠정적 등거리선 획정을 위한 기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³²⁾

■ 표-2.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섬의 효과 ■

사례	판결 연도	관련 섬	연안에서의 거리	크기	인구	효과
영-불 중재재판	1977	Channel Island	프랑스 12마일, 영국 87마일	130,000km ²	약 15만명	없음
		Isles of Scilly	영국 21마일	16km ²	약 2,000명	half effect
튀니지-리비아	1982	Kerkennah Islands	튀니지 11마일	180km ²	1만 4,000명	Half effect
메인만 사례	1984	Islets in the inner Gulf	연안 12마일	-	무인	없음
		Seal Island	Nova Scotia- 16마일	-	유인도서	Half effect
리비아-몰타	1985	Filfia	몰타-5km	0.06km ²	무인도서	없음
		Malta	리비아-340km	314km ²	약 40만명	부분적 효과(75%)
캐나다-프랑스 중재재판	1992	St.Pierre and Miquelon	뉴펀드랜드 연안 12마일	242km ²	약 7,000명	부분적 효과
덴마크-노르웨이	1993	Jan Mayen	그린란드- 500km, 아이슬란드- 600km	377km ²	무인도서(18명의 정부관계자 주둔)	부분적 효과
에리트리아-예멘 중재재판	1999	Dahlak archipelago	연안 인근	큰섬-2개 작은섬-124개	유인도서	완전 효과
		Hanish Island	예멘-16마일, 에리트리아- 22마일	120km ²	무인도서	영해-완전효과, EEZ-효과 없음
		Al-Tayr	-	1km ² 미만	무인	효과 없음
		Zubayr Group	-	-	무인	효과 없음

31)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econd Stage of the Proceedings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Eritrea and Yemen, 1999 para. 139, 146~151.

32)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ICJ, 2001, para. 185, 197.

■ 표-2.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섬의 효과(계속) ■

사례	판결 연도	관련 섬	연안에서의 거리	크기	인구	효과
카타르-바레인	2001	Hawar Islands	카타르-1.4km	50.6km ²	약 4,000명	영해-완전효과, EEZ-효과 없음
		Qit'at Jaradah	-	만조시 12(높이)X4(넓이)미터	무인	부분적 효과
		Fasht al Jarim	연안 12마일	1km ² 이내	무인	효과 없음
루마니아-우크라이나	2009	Serpent's Island	루마니아-19마일	0.135km ²	무인(정부관계자 주둔)	영해-완전효과, EEZ-효과 없음

자료: Clive Howard Schofield, 'The Trouble with Island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9.8, p.195 및 해당 판례³³⁾ 참조

그렇다면 해수면 상승이 해양경계에 있어서 섬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어떠한 쟁점을 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 즉 해양경계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아직 해양경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 체결된 기존 해양경계협약에서 해수면 상승을 고려해 기점이 되는 섬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규정은 첫째, 해수면 상승에 따라 기점이 되는 섬의 지위가 암석 또는 간출지로 변화했다 하더라도 영구히(permanently) 영해기점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명문화시킨 경우이다. 이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섬이 간조노출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점으로 인정되며 해양경계는 변하지 않게 된다. 둘째, 해수면 상승에 따라 기점이 되는 섬의 지위가 변화하여 해양경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협약 당사국은 협의와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고 명문화하는

33) 표에 제시된 판례를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United Kingdom v. France, Arbitration*, 1977.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Tunisia vs. Libyan Arab Jamahiriya*, ICJ, 1982. Cas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Canada vs.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1984.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Libian Arab Jamahiriya v. Malta*, ICJ Judgement, 1985.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Areas Between Canada and France, Court of Arbitration, I.L.M. 1145, 1992.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s. Norway*, ICJ Judgement, 1993.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econd Stage of the Proceedings (Maritime Delimitation), *Eritrea and Yemen*, 1999.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Qatar v. Bahrain*, ICJ Judgement, 2001.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2009.

경우이다. 이 경우 협의와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할지 또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체결된 협약관행을 보면 현재 해수면 상승을 예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경계협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³⁴⁾ 따라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 기존 체결된 해양경계협정의 유효성에 대해 당사국은 기협정의 효력유지, 개정 또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와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당사국 간 협상에 따라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를 포함한 제3자 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해양경계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진행될 경우이다. 이 경우 앞으로의 해양경계협정 체결에 있어서 관련 문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합의 관행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해양경계협정은 협정이 체결되는 각 사례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국가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규범을 창설하는 것은 무척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이 예견되는 지금 이러한 해양경계협정 체결 관행이 국제질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Soft law’ 수준에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인공섬 건설을 포함한 재량적 조치 허용 범위

한편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섬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로서 연안국이 진행하고 있는 인공섬 및 인공 시설물 건설 조치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협약에서는 인공섬 또는 인공시설물과 관련해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³⁵⁾ 특히 제60조와 제80조는 연안국이 배

34) Julia Lisztwan, *op.cit.*, p.181-182.

35) 협약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조(platforms or other man-made structures), 제11조(offshore installation), 제56조(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 and structure), 제60조(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제79조와 제80조(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 and structure), 제246조(scientific research installations) 등이 있음

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각각 인공섬 및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공섬 및 인공구조물의 안전과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해 500미터 범위 내에서 안전수역을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17개 국가에서 약 35개의 인공섬을 건설해 주로 항만, 공항, 거주지, 관광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³⁶⁾ Soons교수에 따르면 인공섬은 “인간이 심해저의 모래, 암석과 자갈 등의 자연적 재료를 이용해 만든 건설물”이며, 인공시설물은 “파일과 튜브 등의 방법으로 해저에 고정된 건설물”로 보았다.³⁷⁾ 이에 대해 “인공섬과 인공시설물의 용도가 다르고 현대기술도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³⁸⁾

그렇다면 인공섬 또는 인공시설물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가질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일까? 이러한 기능은 첫째, 육지의 소실 방지, 둘째, 인간거주지로서의 역할, 셋째, 주권의 표시로서의 역할(sovereignty markers) 등으로 나뉘진다.³⁹⁾ 이 가운데 주목할 기능은 주권 표시의 역할이다. 이 기능은 투발루, 크리바티 등 소도서 국가와 군도국가에게 유용하다. 해수면 상승과 이에 따른 섬의 소실에 대비해 섬을 대신한 주권의 표시로서 인공시설물을 건설하여 기존에 보유했던 해양관할수역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이러한 주권적 표시를 통해 해양관할수역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협약 제60조 8항에 근거해 인공섬 및 시설물은 섬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기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협약 제7조 4항은 간출지 위에 지어진 등대나 유사한 시설의 경우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36) 인공섬 사례는 'Artificial Islands of the World Report' 참조. 2013년 9월 13일 인터넷 검색 <http://www.ead.ae/Tacsoft/FileManager/Quarterly/Artificial%20Islands/Artificial%20Islands%20of%20the%20World%20FINAL.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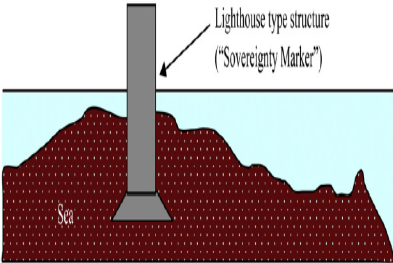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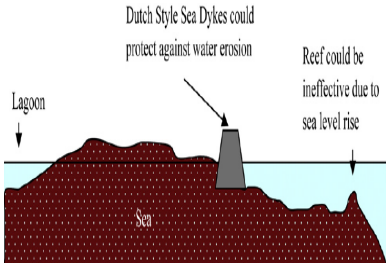
37) Soons, A.H.A., 'Artificial Islands and Installations in International law, Occasional paper no 22, *Law of the Sea Institute, University of Rhodes Island*, 1973. p.3.

38) Honein, S.E., 'The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offshore Installations and artificial Islands, An Industry Report, Lloyd's of London Press LTD, London, 1991, p.1.

39) Grigoris Tsaltas 외 2인, 'Artificial islands and structures as a means of safeguarding state sovereignty against sea level rise: a law of the sea perspective, proceeding of 6th ABLOS Conference "Contentious Issues in UNCLOS – Surely Not?", 2010.1 p.3~6.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확대해석할 경우는 주권적 표시가 해양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으로 인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사건에서는 ‘dyke’의 기능이 협약 제11조의 영구적 항만시설(permanent harbour works)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dyke’와 같은 인공적 시설을 기점으로 인정한 바 있다.⁴⁰⁾ 단 이 경우에도 영해 이원의 해양경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의 효과는 제한하고 있어 국가가 ‘dyke’의 재량적인 건설을 통해 영해 이원의 해양경계를 확장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표-4. 주권적 표시와 ‘Sea Dyke’

‘Sovereignty Marker’	‘Sea Dykes’
 <p>Lighthouse type structure ("Sovereignty Marker")</p>	 <p>Dutch Style Sea Dykes could protect against water erosion</p> <p>Lagoon</p> <p>Reef could be ineffective due to sea level rise</p>

자료: Lilian Yamamoto, Miguel Esteban, ‘Vanishing Island States and Sovereignty’, *Ocean & Coastal Management* 53, 2010, p4~5

나아가 오키노도리시마의 사례⁴¹⁾와 같이 섬이라고 할 수 없는 암석 또는 간조노출지에 등대나 항만 등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섬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40)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2009, para. 133~141.

41) 오키노도리시마는 일본 도쿄에서 1,74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 위치한 산호초이며, 만조 때 수면 위 70cm 정도 드러나 파도가 조금만 쳐도 물속에 잠기는 ‘침대 크기’의 2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의 복원을 위해 1987년부터 3년간 285억 엔을 들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1998년부터 2년간 8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 티타늄 방호시설을 설치했다.(이상 김경신, 이주하, ‘일본의 도서관리 정책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KMI’,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88호, 2008.9, p7~9) 일본은 2008년 11월 12일, 오키노도리시마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확장 내용을 포함한 대륙붕 한계 확장 문서를 유엔에 제출했으나,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EEZ 및 대륙붕을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국제법에 위배되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unilateral act)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타국에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 오키노토리시마의 경우 일본이 EEZ나 대륙붕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지역은 여전히 공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타국은 공해에서 항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분쟁수역에서 인공섬을 건설해 군대를 주둔시키는 경우 역시 분쟁당사국과의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⁴²⁾

따라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인공섬 또는 인공시설물 건설이 해양경계 확정과 이를 통한 해양관할수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할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섬의 소실이 예상되는 경우 소도서 국가의 주권의 표시로서 건설된 인공시설물이 원래 소도서 국가가 관할하던 해양수역만큼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에 국한되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현 해양법규범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컨센서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기타 법적 쟁점

위에서 언급한 쟁점 외에 소도서국가의 영토 소실의 경우에도 ‘국가성’ 유지를 명목으로 몬테비데오 협약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적 국가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새로운 개념의 ‘기후난민’이 허용되는지 등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 ‘기후 난민(climate refugee)’의 인정 문제

현재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섬의 소실과 주민의 이주(evacuation)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크리바티를 구성하고 있는 3개 섬그룹 중 하나인

42) 자세한 내용은 Zou Keyuan, 'The Impact of Artificial Islands on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paratly Islands', Home Conferences & Seminars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2011.11 참조

‘Phoenix Group’은 8개 섬으로 구성되어 왔는데, 현재 ‘Kanton Island’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파푸아뉴기니의 ‘Cateret Islands’의 2700명의 거주민은 80킬로미터 남쪽 섬인 부건빌(Bougainville)섬으로 단계적으로 이주하고 있다.⁴³⁾ 이처럼 해수면 상승으로 야기되는 대량 이주가 초국경적인 문제로 확대될 경우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러한 이주민에게 ‘기후난민(climate change refugee)’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현재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난민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정치적’ 난민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⁴⁴⁾ 일례로 미국은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을 통해 난민협약에 근거한 요건을 충족한 정치적 난민에게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환경난민에게까지 난민지위를 확대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해 본국을 떠나 미국 내로 유입한 실향민(displaced person)에게 잠정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⁴⁵⁾ 국제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몰디브와 방글라데시는 2006년 ‘기후난민(climate refuge)’을 인정하는 난민협약의 개정을 요청했으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은 환경난민이나 기후난민을 포함한 개정은 현재 난민협약의 명확성(clarity)을 잠재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함으로써 난민협약의 개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표시했다.⁴⁶⁾ 그러나 최근 들어

43) The Age National, ‘First climate refugees start move to new island home’, 2009.7.29, <http://www.theage.com.au/national/first-climate-refugees-start-move-to-new-island-home-2009-0728-e06x.html>, 인터넷 기사 검색 2013.9.26

44) 1951년 난민지위협약 상 원문은 다음과 같다: “... any person who ...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 이에 따라 협약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존재, (2)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상징, (3) 국적국 밖의 체류, (4) 국적국에 의한 보호의 불능 혹은 거부라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침해, 자연재해,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이유로 본국을 떠나는 이주민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난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이미 난민의 범위를 확대한 협약과 선언이 나타나고 있다. 1969년에 ‘아프리카 난민문제에 관한 OAU협약(OAU 난민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1984년 난민에 관한 카르타헤나 선언(Cartagena Declaration)”이 제정되었다.

45) Robert Meltz, *op.cit.*, p.37.

46) Jermy Kelley, ‘Climate Change and small island States: A Drift in a Raising Sea of Legal Uncertainty’, *Sustainable Development Law & Policy*, Vol.11 Issue 2, 2011.

UNHCR의 정책이 점차 ‘기후난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⁴⁷⁾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 컨퍼런스(Climate Change Conference)’에서 UNHCR은 기후변화가 가까운 미래에 국경 간 이민을 증가시킬 것이며, 해수면 상승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난민(refugee)’의 엄격한 법적 개념으로 인해 가라앉은 섬과 같이 거주할 수 없는 본국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migrants)’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의 격차(protection gap)’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⁴⁸⁾ UNHCR을 중심으로 한 기후난민 인정 노력은 ‘있어야 할 법(lex ferenda)’ 측면에서 어떻게 결실을 이룰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2) 영토 없는 국가인정의 문제

1933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에 따르면 국가는 ‘항구적 인민(permanent population)’, ‘한정된 영토(defined territory)’, ‘정부(government)’ 및 ‘외교 능력(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other nations)’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섬나라의 소멸은 곧 국가의 소멸을 의미한다. 무력으로 인한 타국 영토획득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현재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무주지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소도서국가들이 영토 개념에 기반하여 기존의 국가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최근 영토 없는 국가개념(deterritorialized state)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⁴⁹⁾ 이는 망명정부(government-in-exile)의 형태 또는 타국과의 신탁협정(trustee agreement)을 통해 기존 국민들을 보호하고 문화

47) 난민개념의 발전, 혹은 확대에 있어서 국제공동체의 위임을 받은 UNHCR은 자연스럽게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UNHCR은 이러한 위임에 근거, 새로운 형태의 국제사회의 필요에 부응하여 난민 보호에 관한 법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Guy S. Goodwin-Gill, Jane McAdam,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4.)

48) UNHCR News, ‘Climate change could become the biggest driver of displacement: UNHCR chief’, 2009.12.16. <http://www.unhcr.org/4b2910239.html> 2013.9.25일 인터넷 검색

49) 자세한 내용은 R. Rayfuse, ‘Wither Tuvalu? International Law and Disappearing State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Faculty of Law Research Series No.9*, The Berkeley Electronic Press, Berkeley, 2009. 참조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통해 일정한 영토 없이도 기존의 국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⁵⁰⁾ 특히 이러한 논의를 앞서 살펴본 주권적 표시 논의와 연결해 본다면, 섬이 수몰되더라도 주권 표시(sovcreignty marker)를 통해 영해뿐만 아니라 EEZ 및 대륙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인구가 거주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원래의 연안국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반 및 타국과의 협력을 위한 수단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직 국제사회에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더라도 법적 측면에서 ‘영토 없는’ 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국의 국가승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의 국가와의 연속성을 인정해 국가승인이 따로 필요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5. 소결

섬은 그 자체로 영해, EEZ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으며,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기점으로서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섬이 암석 또는 간조노출지로 변화하는 경우, 협약에 근거해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효과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연안국은 기존의 섬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공섬 및 구조물 건설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해수면 상승에 직면한 기존의 소도서 국가가 인공섬 건설 또는 섬 자체에 인공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협약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협약 제121조 제1항은 영해를 비롯해 EEZ와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naturally formed)’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섬은 단지 500미터 내의 안전수역만을 가질 수 있을 뿐 영해를 포함한 어떠한 해양관할수역을 가해질 수 없다. 그러나 섬의 수몰이 예상되는 소도서 국가는 기존 본토섬을 대체할 여러 방안을 구상중이며, 인공섬 건

50) 실제로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국가의 육지 경계가 완전히(fully) 정해지거나(delimited) 한정되어야(defined) 한다는 국제적인 규칙은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North Sea Continental Case(Germany vs Denmark, Netherlands), ICJ, 1969.2, para. 46.

설이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몰디브의 경우 수도 인구를 이주 시킬 목적으로 1997년 ‘Hulhumale’ 섬을 건설했다.⁵¹⁾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섬주민을 이주시키고 기존 섬의 기능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해 및 EEZ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아가 암석 및 간조노출지를 대상으로 인공구조물을 건설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해양경계를 확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해수면 상승등과 관련된 인공섬 및 구조물 설치의 문제는 ‘법의 불충분성(insufficiency)’의 문제이다. 이 경우는 관련 협약 규정이 있고, 협약을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하지만, 소도서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보완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섬의 수몰로 발생되는 대량 이주민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문제, 몬테비데오 협약에 근거해 소도서 국가의 수몰로 인한 영토소멸이 국가의 소멸로 이어져야 하는지의 문제는 아직 법제도적 장치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의 부재(legal gap)’의 문제이다. 난민협약을 통해 기후난민을 인정할 경우, 경제, 인권 등 다른 이유로 인한 대량 이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난민협약 이외의 새로운 협약 체결을 최종목표로 하되 그 이행과정에서 기후난민기금(climate refugee fund) 설립, UNFCCC의 부속의정서로 기후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는 것⁵²⁾이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OAU 난민협약과 같이 지역적 협약 또는 양자적 협약을 통해 태평양 소도서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범위의 국가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현 국제법 체제에서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개념을 고려해 볼 때 섬의 소실은 국가의 소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망명정부 및 신탁협정을

51) ‘Artificial Islands of the World Report’ 참조. 2013년 9월 13일 인터넷 검색
<http://www.ead.ae/Tacsoft/FileManager/Quarterly/Artificial%20Islands/Artificial%20Islands%20of%20the%20World%20FINAL.pdf>

52) David Wei 외 2인, ‘Receding maritime zones, uninhabitable states and climate exile: How international law must adapt to climate chang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Development*, 2011, p.7~8.

통한 영토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국가 개념(deterritorialized state)은 현재로서는 이론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실효성이 낮다. 다행스러운 것은 몰디브 및 크리바티와 같이 섬 수몰 예상국들이 정책적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몰디브 사례와 더불어 크리바티는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민을 타국 내에 거주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언어, 재정지원을 포함한 정주계획(merit-based relocation)을 추진하고 있다.

IV. 해양경계 안정화⁵³⁾를 위한 제언

1. 해양경계가 안정화되어야 하는 이유

국제법의 주요 기능은 ‘국제질서의 평화와 안정 확보’, ‘국가 간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 달성’, ‘갈등 및 분쟁 시의 형평한 해결’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예상되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고려할 때 해수면 상승에 따라 해양경계가 변화하기보다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양경계 안정화의 경우, 첫째, 해수면 상승이라는 지속적인 외부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해양경계가 동결되어 있음으로써 국가 간 해양경계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해양활동 주체들의 예측가능한 행위가 가능하게 되어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해수면 상승에 따라 해양경계가 변화할 경우 소도서국가 및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및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반면, 내륙국이나 타국은 넓어진 공해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그러나 해수면상승의 주요 요인인 기후변화가 선진국의 축적된 산업 활동에 의해 야기되었으나, 그 피해는 소도서국가,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및 후진국에 주로 미치고 있다는 점, 피해를 직

53) ‘안정화’는 해양경계가 동결(freezing)되어 항구적으로(permanently)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접적으로 입는 소도서국가는 어업을 포함한 해양자원이 국가산업의 핵심이고, 나아가 국가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간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의 측면에서 해양경계의 동결을 통해 기존 소도서국가 및 연안개도국의 해양관할권 확보를 통한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해수면 상승에 따라 해양경계가 계속 변화하는 경우, 이에 따른 갈등 및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양경계를 동결시킴으로써 해수면 상승에 따라 예상되는 갈등 및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해양경계 안정화가 필요함을 전제로 안정화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해양경계 안정화 방안

해양경계 안정화 방안은 크게 ‘국가’ 차원, ‘양자 및 다자’ 차원, 국제사회 차원 등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국가 차원의 방안

(1) 인공적으로 섬의 소실을 보호하는 방안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안국은 인공섬의 건설 또는 인공적 구조물의 설치 등을 통해 섬의 소실을 막고 이를 통해 기선과 해양경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해기점 섬의 수몰을 예상한 사전적 예방조치(precautionary measures)로 연안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기존에 섬이었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단 일부분의 암석(rock)만 존재하는 경우라도 협약 제121조 1항의 섬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⁵⁴⁾ 이 경우 인공적 구조물 설치의 암석이 간조노출지로 되거나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방지해 주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일본정부는 오

54) Lilian Yamamoto, Miguel Esteban, "Vanishing Island States and Sovereignty",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2009.6.21, p.11~12.

키노도리시마가 협약 제121조 3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1항이 적용됨으로써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가 해수면 상승 등의 요인으로 암석이 된 경우와 오키노도리시마와 같이 원래부터 암석인 경우는 법적 지위를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인공적 구조물의 설치에 따른 효과 또한 달라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인공적 시설물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소도서 국가 및 저개발국가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2) 교묘한 무작위 (masterly Inactivity)

협약 제16조 2항에 따라 연안국은 기점 및 기선을 반영한 해도를 적절하게 공표(due publicity)해야 하며, 이를 유엔사무총장에 기탁해야 한다. 그러나 연안국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선 및 기점의 변화를 해도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기점과 해안선 변화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유엔사무총장에게도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해양경계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함으로써 동결시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변화한 환경과 이에 따른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해도를 사용함으로써 해양주체들의 활동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3) 역사적 수역 원칙 (historical waters doctrine)

이는 연안국이 해수면상승으로 축소된 수역의 권리를 계속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양경계가 동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주로 만(bays) 및 내수(internal waters)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19세기에 개발되었다.⁵⁵⁾ 이후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부터 1982년 제3차 해양법회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수역을 협약에 반영할 것인지가 논의되었으나, 끝내 협약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에서는 역사적 수역이 내수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면서 대륙붕에서의 역사적 수역이 인정될 수

55) Jenny Grote Stoutenburg, op.cit., p.281.

있다고 판시했다.⁵⁶⁾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연안국은 해수면 상승에 따라 축소된 영해 및 EEZ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역사적 수역 원칙을 넓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제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역의 변화가 생겨야만 그 지역이 역사적 수역이라고 사후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해수면 상승을 예견해 사전적 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역사적 수역의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⁵⁷⁾ 첫째, 역사적 권원을 획득하기까지 타국의 항의가 없이 일정기간의 시간(period of time)이 흘러야 한다. 둘째, 영향 받는 국가(affected states)를 포함한 국제적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안국이 이 원칙을 주장하기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섬이 수몰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도서 국가들의 역사적 수역 주장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요건에 대해선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양국 및 다자 차원: 해양경계협정 체결

해양경계협정은 인접 연안국 간 EEZ와 대륙붕 경계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해양경계가 확정되지만, 확정이 어려울 경우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 등 제3자 분쟁해결기관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따라서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해양경계 변화 여부는 당사국 간 협상에 의해 우선 결정된다. 이 경우 연안국은 해수면 상승이라는 대외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해양경계를 안정화시키는 내용을 협정에 담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시마다 협상을 함으로써 드는 협상비용과 협상테이블에서 활용할 자료를 위해 조사와 탐사활동을 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해양경계 변화 가능성에 따라 양당사국의 이 해관계도 변화하게 되어 갈등 또는 분쟁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미 체결된 해양경계 협정은 해양경계 안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결론적으로 이론적, 관행적 측면 모두 기존의 해양경계협정 또한 해

56)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Tunisia vs. Libyan Arab Jamahiriya*, ICJ, 1982, para.100.

57) Jenny Grote Stoutenburg, *op.cit.*, p.282~283.

양경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첫째, 조약법협약 제62조 2항(a)는 조약이 경계협정일 경우(if the treaty establishes a boundary)일 때는 사정의 근본적인 변경(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시에도 종료 또는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조약이 규정하는 ‘경계(boundary)’에 해양경계(maritime delimitation)’도 포함된다면 해양경계협정체결 후 해수면 상승이라는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일방국의 종료 또는 무효 사유로 원용될 수 없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물론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재협상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ICJ는 “육역이든 대륙붕이든 경계획정과 정은 본질적으로(essentially) 동일하다. 그리고 필수불가결하게(inevitably) 안정성과 항구성이라는 동일한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본질적인 사정변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계협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해양경계와 육역경계는 동일하다고 보았다.⁵⁸⁾ 둘째, 관행적으로 기존의 137개 해양경계협정에서 어느 한 협정도 종료(termination)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⁵⁹⁾ 이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다면 해양경계협정이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의 해양경계협정 지침서인 ‘해양경계 핸드북(Handbook on Maritime Delimitation)’에서도 “해양경계협정은 항구성(permanence)과 안정성(stability)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경계협정 체결의 최우선 목적은 안정성과 최종적 상태(finality)를 얻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⁶⁰⁾ 또한 해수면 상승, 화산활동 등 해양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예견하고 있는 협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조사되고 있다. 다만 1986년 버마와 인도 간 해양경계협정에서 “당사국은 현존하는 섬과 당사국 해양경계 내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어떠한 섬들에 대해 주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73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 해양경계협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⁶¹⁾

58)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 *Greece vs Turkey*, ICJ, 1978, para. 85.

59) David Colson, ‘The Legal Regime of Maritime Boundary Agreement’,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p.41~42, 1996, Julia Lisztwan, *op.cit.*, p.180에서 재인용

60) UN, *op.cit.*, p.82,

61) Julia Lisztwan, *op.cit.*, p.181-182.

3) 국제사회 차원

현재 국가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국제법 연원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구의 결의 등과 관련되어 ‘연성법(soft law)’이 국가를 구속할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해양경계확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틀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의 점진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유엔총회의 결의 채택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1) 해수면상승에 대한 이행협정의 체결

해양 분야에서 변화하는 국제법질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조항을 재검토하고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협약은 제312조에서 협약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일방당사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명시적으로 협약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협약이 탄생하기까지의 국가 간 협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협약을 개정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협약의 개정보다 협약의 부속서로서 이행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1994 심해저 이행협정(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 of the Convention)과 1995 어업협정(Fish Stocks Agreement)이 협약의 이행협정으로 체결되어 있다.⁶²⁾ 이들은 협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⁶³⁾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식의 가칭 ‘해수면 상승과 해양경계 이행협정(Agreement on Sea Level and Maritime Delimitation)’ 체결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협정을 통해 협약 제76조 9항을 응용해 대륙붕이 아닌 다른 수역으로 확장하고 ‘연안국은 유엔사무총장에 자료 기탁을 통해 기선과 해양경계를 항구화할 수 있다’

62) 이외에 현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을 위한 워킹그룹을 설립해 국가관할권 이원에서의 해양유전자자원을 위한 법적 레짐 창출이 유엔총회를 통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이행협정의 창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3) 이행협정은 제2조 1항에서 협약 제11부(심해저)의 조항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행협정의 발효 이후 참여국의 기선과 해양경계는 유엔사무총장에 기탁과 동시에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행협정은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편적인 참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한 국가의 해양경계 안정을 통한 권익의 확보는 타국의 공해에서의 권익(어업권 포함) 확보와 상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구속력 있는 협정체결을 반대하는 국가군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새로운 국제관습법의 창설⁶⁴⁾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경계 동결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는 반면, 해양경계는 기점의 선택과 이로 인한 기선에 의해 확정됨을 규정하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해양경계의 안정화는 기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선 및 해양경계가 변화하지 않는 효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해석상 협약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과 같은 현상을 협약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수면 상승으로 야기되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협약을 대체하기보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국제관습법 창설의 논의가 가능하다.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국가관행(state practice) 및 법적 확신(opinio juris)으로 구성된다. 국가관행은 실질적 요소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공문서 포함), 국가 입법행위, 국내법원 또는 국제법원의 판결문 및 조약 등으로 나타난다. 법적 확신은 심리적 요소로 국가가 어떤 행위를 통상적으로 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행위가 국제법상 요구되어진다는 확신감에 기인한다. 오늘날 학설의 추세는 직접 국가들의 심리적 확신감을 찾기보다는 실제 국가들의 행위로부터 간접적으로 법적 확신을 추론하고 있다.⁶⁵⁾ 따라서 연안국의 해양경계협정에서 해양경계 안정화 조항을 명문화하는 관행, 국가들의 국내법으로 해

64) 이러한 새로운 국제관습법화 논의는 1990년 Caron교수로부터 제기되었다.(David D. Caron, 'When Law Makes Climate Change Worse: Rethinking the Law of Baselines in light of a Rising Sea Level', *Ecology Law Quarterly* 621, 1990, p.31~32.)

65) M.Akehurst 지음, 박기갑 옮김, 『현대국제법개론』, 1997, p.53-59.

양경계를 안정화하는 입법 제정, 해양경계 안정화를 위한 유엔총회결의 제정, 해양경계협정 안정화를 명문화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이행협정 체결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새로운 국제관습법 형성을 위한 국가관행의 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축적을 통해 국가들의 법적 확신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 양자적 또는 지역적 관습법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⁶⁶⁾ 왜냐하면 일반관습법화하지 못하더라도 소도서국가와 연안국들은 해수면상승과 무관하게 해양경계를 동결하는 관행을 형성함으로써 협약과 충돌함이 없이 지역 차원의 새로운 국제관습법 창설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관습법의 성립은 국제해양법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진보적이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일반 국제관습법은 이론적으로 지속적으로 형성에 반대한 국가(persistent objector)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양경계 안정화에 반대하는 국가군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추구하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또한 북해대륙붕 사건 이후로 속성관습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관행이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축적되어야지 일반국제관습법 형성을 위한 실질적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셋째, 해수면 상승이라는 미래의 전망만으로 현재를 규율하는 (예방적)국제관습법을 창설할 수는 없다.

66) Asylum Case, *Columbia v. Peru*, ICJ Judgement, 1950. Case Concerning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Portugal v. India*, ICJ Judgement, 1960. Asylum 사건(1950)에서는 콜롬비아가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한정된 지역 관습법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페루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다.(동 사건 p.276). 이에 재판소는 이러한 지역관습법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콜롬비아 정부가 그러한 관습법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보았다. 또한 페루가 협약 초기부터 협약의 비준을 거부해 왔으므로, 페루에게 관습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p.278~279). 또한 인도통행권 사건(1960)에서 포르투갈이 통행권이 지역관습법으로써 인정된다고 본 반면, 인도는 지역관습법이 양국간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재판소는 두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도록 합의된 관행이 오래 지속되었다면 양국 간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지역관습법, 특히 양자 지역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했다.(동 사건 p.39,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 reason why long continued practice between two States accepted by them as regulating their relations should not form the basis of mutual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3) 유엔총회 결의를 통한 입법 (law-making) 효과 부여

소도서국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990년 ‘소도서국가연합(AOSIS)’⁶⁷⁾을 설립해 교토의정서 초안 작성 과정 등을 포함해 기후온난화와 해수면 상승문제와 관련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⁶⁸⁾ 특히 유엔총회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발언권 역시 커지고 있다. 2009년에는 소도서국가가 주도의 유엔총회결의⁶⁹⁾가 회원국의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되기도 했다. 이처럼 소도서 국가 및 연안국은 유엔총회를 적극 이용해 비구속적 규범이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권위적 체제로 활용할 수 있다. 유엔총회의 결의는 안보리 이사회의 결의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비구속력을 지닌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가들의 논의와 합의를 상대적으로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유엔총회결의는 그 자체로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함의를 내포하면서 국가들의 동의를 통해 점차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유엔총회 결의는 국가들의 일반의지(*general will*)의 표시로 국제관습법의 법적확신(*opinio juris*)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의 경우 결의자체의 구속력 보다는 금반언(*estoppel*),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 등의 국제법 일반 원칙의 구속력이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다.⁷⁰⁾

67) AOSIS는 전 세계의 42개 회원국과 옵저버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37개국이 유엔회원국으로 개도국의 28%, 유엔 총 회원국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큰 규모의 연합체이다. KMI, 『소도서국가(SIDS)와의 해양협력 방안 연구』, 2010.12, p.51.

68) KMI, *ibid.*, p.140.

69) ‘Climate change and its possible security implications’, UNGA Res.63/281, 2009.6.3. 한편 섬나라 국가들은 1989년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말레 선언(Male Declaration on Global Warming and Sea Level Rise)’을 통해 해수면상승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시작했으며, 20년 후인 2009년에 소도서국가연합(AOSIS)은 ‘기후변화 선언(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2009)’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서 개발과 기후변화로부터 섬의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70) Jenny Grote Stoutenburg, *op.cit.*, p.307~310.

3. 소결

해수면 상승이라는 대외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계 변화보다 해양경계 안정화가 ‘국제질서의 평화와 안정 확보’, ‘국가 간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 달성’, ‘갈등 및 분쟁 시의 형평한 해결’이라는 국제법의 주요 기능에 비추어 더 바람직하다. 이를 전제로 해양경계 안정화를 위해 국가수준, 양자 및 다자수준, 국제사회 수준의 다차원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차원적 방안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 구속력을 가지는 이행협정 체결이나 신국제관습법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표라고 하면 그 외의 방안은 과도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관행의 축적’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컨센서스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나아가 비강제성을 지닌 유엔총회(결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와 포괄적인 지지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신국제관습법 또는 이행협정의 체결로 이어지는 방향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제시는 현 시점에서 그 자체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기 방안이라기 의미보다는 그러한 방안을 찾기 위한 시사점을 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 각 방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함으로써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향후의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해수면상승은 해양경계 변동을 통해 국제해양법의 시발점인 국가 해양관할 수역과 공해의 이원적 구별로 구성되는 현 해양법 체제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해양경계와 해양관할권을 지키려는 연안국과 새로운 해양환경을 반영한 해양법체제에서 공해의 범위를 더 확보하려는 국가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극의 해빙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섬의 경우도 북극 해양경계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연안국 간 경쟁과 갈등에 새로운 변수

로 작용할 수 있다. 영해 기점 섬의 법적 지위 변화는 해양경계의 문제로 이어지고, 소도서 국가의 경우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가져올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제법적으로 예상 가능한 쟁점들을 ‘현실에 있는 법(*lex lata*)’인 유엔해양법협약과 이를 근거로 한 판례 등과 더불어 ‘앞으로 있어야 할 법(*lex ferenda*)’인 새로운 국제관습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해수면 상승이 야기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찾고,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쟁점 해결을 위해 본 논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이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국가에 있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에 근거해, 그 피해를 직접 받게 되는 소도서국가의 이익(간접적으로는 연안국 포함)을 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이는 국가 간 이해관계에 있어 적용되는 ‘형평(*equity*)’의 시각으로 본 논문의 내용 전체에 적용되고 있다. 해양경계의 안정화, 섬의 기능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인공섬에 해양경계를 위한 법적 지위 부여, 섬 주민 이주 지원을 기후난민 지위 부여 등 전체적인 논문의 전개과정에 이러한 시각이 반영되었다.

둘째, 해수면상승이 국가 간 해양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목했다. 해양경계획정은 항상 국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해수면 상승이 해양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곧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라는 대외환경변화에 따른 해양경계 변화보다 해양경계 안정화가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안정성’, 국가 간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 갈등 및 분쟁 시의 ‘형평한 해결’이라는 국제법의 주요 기능에 더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후, 이에 대해 국가수준, 지역수준, 국제사회 수준의 다차원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경계 안정화를 위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이행협정 체결이나 신국제관습법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표라고 보고, 그 외에 제시된 방안은 ‘국가관행의 축적’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컨센서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기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해수면 상승이 소도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해수면 상승은 섬의 영해 기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섬 자체의 존 속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소도서 국가는 섬 기능 유지를 위해 인공섬 및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수몰 섬을 이탈해 주민들 을 이주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섬의 수몰이 예견되는 경우에 한 정되어 인공섬에 해양경계 확정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약의 예외로 써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한 이주민의 생존기반 확보를 위해 주 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이주계획을 마련하고, 기후난민기금(climate refugee fund)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부속의정서로 기후난민 보호를 위 한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후난민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 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양경계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쟁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⁷¹⁾에 따라 향후 제3자 분쟁해결기구의 역할이 더욱 커 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 논문을 마치도록 한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 또는 사법기관은 EEZ와 대륙붕 등의 해양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이 제시한 기선을 반드시 따르지 않으며, 관련 연안의 물리적 지 형(physical geography)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기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고 있다.⁷²⁾ 둘째, 해수면 상승을 고려해 해양경계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 경계 협정 체결이 해양경계가 변화했을 경우 얻게 되는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3국의 국제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정이 제3국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1차 심사일(2013년 11월 19일)
 재확정일(2013년 12월 4일)

71) 해수면상승이 기후변화로 국제소송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해양경계의 불확실성은 경계확정을 두고 연안국 간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Cleo Paskal, op.cit.,)

72)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2009, para. 117, 137. Maritime Delimitation Case, Eritrea v. Yemen, Award, 1999, para. 142 참조

■ ■ 참고문헌

1. 김경신. 2008. 『북극해에서 새롭게 발견된 섬,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 독도·해양영토브리핑, 제6호
2. 김경신·이주하. 2008. 『일본의 도서관리 정책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88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박기갑. 1997. 『현대국제법개론』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소도서국가(SIDS)와의 해양협력 방안 연구』.
5. Charles Di Leva, Sachiko Morita. 2007. 8. “Maritime Rights of Coastal States and Climate Change: Should States Adapt to Submerged Boundaries?”. *Law& Development Working Paper* No.5. World Bank.
6. Cleo Paskal. 2007. 6. How climate change is pushing the boundaries of security and foreign policy. EEDP Chatham House.
7. Clive H. Schofield. 2009. 8. “The Trouble with Island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8. _____. 2009. 1. “Against a rising tide: ambulatory baseline and shifting maritime limits in the face of sea level ris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Islands and Oceans*.
9. David D. Caron. 1990. “When Law Makes Climate Change Worse: Rethinking the Law of Baselines in light of a Rising Sea Level”. *Ecology Law Quarterly* 621.
10. David Colson. 1996. “The Legal Regime of Maritime Boundary Agreement”.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11. David Wei *et al.* 2011. "Receding maritime zones, uninhabitable states and climate exile: How international law must adapt to climate chang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Development.
12. D.H Anderson. 1996. "Belgium-United Kingdom: Report Number 9-17, in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1903-1904*", Jonathan I. Charney & Lewis

M. Alexander 3ds.

13. Grigoris Tsaltas *et al.* 2010. "Artificial islands and structures as a means of safeguarding state sovereignty against sea level rise: a law of the sea perspective". proceeding of 6th ABLOS Conference "Contentious Issues in UNCLOS - Surely Not?".
14. Guy S. Goodwin-Gill, Jane McAdam, 2007.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5. Honein, S.E. 1991. "The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offshore Installations and artificial Islands". An Industry Report. Lloyd's of London Press LTD. London.
16.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2012. 8. "Baselin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17. IPCC. 2013. 9. 27. "Working Group I Contribution to the IPCC Fifth Assessment Report Clims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Summary for Policymaker".
18. Jenny Grote Stoutenburg. 2011. "Implementing a New Regime of Stable Maritime Zones to Ensure the (Economic) Survival of Small Island States Threatened by Sea-Level Ris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26.
19. Jermy Kelley. 2011. "Climate Change and small island States: ADrift in a Raising Sea of Legal Uncertainty". *Sustainable Development Law & Policy*, Vol.11 Issue 2.
20. Julia Lisztwan. 2012. "Stability of Maritime Boundary Agreements",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7-1.
21. Lilian Yamamoto, Miguel Esteban. 2009. "Vanishing Island States and Sovereignty". *Oceand and Coastal Management*.
22. OPRF. 2005. 9. Proposal for Rio+20, appendix I, For the Bet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slands and Their surrounding Ocean

Areas, p.11.

23. R. Rayfuse. 2009. *Wither Tuvalu? International Law and Disappearing State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Faculty of Law Research Series No.9. The Berkeley Electronic Press, Berkeley.
24. Robert Meltz. 2013. "Climate Change and Existing Law: A Survey of Legal Issues Past, Present and Future". 의회보고서(CRS).
25. Soons, A.H.A. 1973. "Artificial Islands and Installations in Internatioanal law". Occasional paper no 22. Law of the Sea Institute. University of Rhodes Island.
26. UN. 2000. *Handbook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27. Wilson VornDick. 2012. 11. 8. "Thanks Climate Change: Sea-Level Rise Could end South China Sea Spat". *the Diplomat*.
28. Zou Keyuan. 2011. "The Impact of Artificial Islands on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paratly Islands". Home Conferences & Seminars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인터넷 자료〉

29. 세계일보. "온난화라더니, 북극빙하 되레 60% 늘어", <http://www.segye.com> 2013.9.9.
30. MBC. "바닷속 얼음도 녹는다. 남극 ‘몰밀 해빙’ 첫 확인". 2013.10.1자 방송, <http://imnews.imbc.com>, 2013.10.1 인터넷 검색.
31. 뉴질랜드 정부. "New Zealand's immigration relationship with Tuvalu". <http://www.mfat.govt.nz> 2013. 9. 17 검색.
32. Artificial Islands of the World Report. 2013년 9월 13일 인터넷 검색 <http://www.ead.ae/>
33. The Age National. "First climate refugees start move to new island home". 2009.7.29. <http://www.theage.com.au>, 2013.9.26 인터넷 검색.
34. UNHCR News. "Climate change could become the biggest driver of

displacement: UNHCR chief", 2009.12.16. <http://www.unhcr.org> 2013.9.25
일 인터넷 검색.

35. Treehugger. "To Escape Rising Seas, Maldives President May Move His Entire Island Nation to Australia". 2012.1.6. <http://www.treehugger.com>, 2013.9.26 인터넷 검색.

〈참고한 국제협약 및 국제 판례〉

36.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37. 1951년 난민지위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38. 1969년 조약법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39.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40. Asylum Case, Columbia v. Peru, ICJ Judgement, 1950.
41. North Sea Continental Case, *Germany vs Denmark, Netherlands*, ICJ, 1969.
42.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United Kingdom v. France*, Arbitration, 1977.
43.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 Greece vs Turkey, ICJ, 1978.
44.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Tunisia vs. Libyan Arab Jamahiriya*, ICJ, 1982.
45. Cas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Canada vs.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1984.
46.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Libian Arab Jamahiriya v. Malta*, ICJ Judgement, 1985.
47.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Areas Between Canada and France, Court of Arbitration, I.L.M. 1145, 1992.
48.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s. Norway*, ICJ Judgement, 1993.
49.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econd Stage of the Proceedings (Maritime Delimitation), *Eritrea and Yemen*, 1999.

50.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Qatar and Bahrain*, ICJ, 2001.
51.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2009.